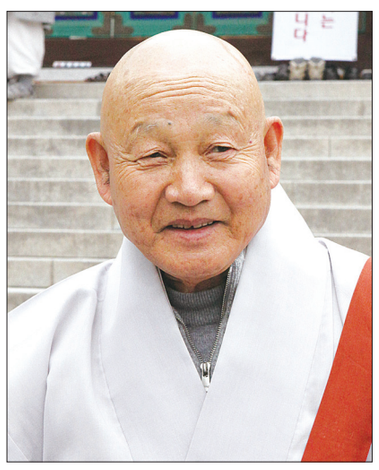
조계종 종정 추대절차 착수…누가 거론되나

〈사진 법랍 순〉


천호월서 대종사


학산대원 대종사


수봉세민 대종사


중봉성파 대종사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월서 · 대원 · 세민 · 성파 스님
12월 13일 종정 추대회의 소집
10년만의 새 종정에 관심 집중

조계종이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종정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차기5대 종정에 누가 추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원로회의는 12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5대 종정 추대회의를 연다.

조계종 종정은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법통을 승계한다는 점에서, 종단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종헌에 따르면 종정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으며, 현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는 연임해 2022년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원로회의법에 따르면 종정 추대회의는 종정 임기 만료 3개월 전 혹은 유고시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추대회의에는 원로회의 의원 전원과 총무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이 참여하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원로회의 인원은 의장 수봉세민 대종사를 포함해 21명이다.

종헌에 따르면 종단 최고 어른으로서 상징성과 권한을 가진다. 전계대화상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 또는 종단 징계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종단 비상시에는 원로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

무엇보다 이번 종정 추대회의에서 결정될 제15대 종정은 진제법원 대종사의 중임 이후 10년만에 새로운 종정이 추대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법주사 조실 천호월서 대종사,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대원 대종사,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수봉세민 대종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성파 대종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이하 법랍순)

천호월서 대종사는 종단 개혁과 청정수행 가풍을 세운 금오 스님의 상좌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56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9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동화사, 해인사, 봉암사, 제주 영주선원 등에서 수선안거 했으며, 조계사, 불국사 주지와 조계종 제4·5·6·8·10·12대 중앙종회의원, 제8대 중앙종회의장, 초심호계원장과 호계원장 등 종단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9년 금오선수행연구원을 설립해 금오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는 한편, 2012년 국제개발협력단체 천호월서희망재단을 설립해 라오스와 캄보디아, 네팔 오지마을의 학교 설립 및 교육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며 세계일화를 통한 실천행을 이어가고 있다.

학산대원 대종사는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지낸 불교계 대표 수좌다. 2001년 재가자를 위한 오등시민선방을 개원해 참선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56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8년 사미계를, 196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2013년 해인총림 서당, 고암문도회 회주에 추대, 원로의원에도 위촉됐다. 2017년 조계종 종정 자문위원 소임을 맡았으며 현재 원로회의 수석부의장이다.

수봉세민 대종사는 원로회의 의장이자 '염불' 대가로 유명하다. 해인사 주지 소임을 맡은 당시 '팔만대장경'의 현대적 계승을 목적으로 동판 팔만대장경 조성사업을 펼쳤고 전쟁으로 소실된 경기도 연천군 원심원사 복원을 이끌었다. 수봉세민 대종사는 조계종 前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1956년 사미계, 196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일본 경도불교대학을 졸업했고 제8~10대 중앙종회의원, 동국대 선학과 강사, 조계사 · 선암사 ·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다. 2012년 원로의원으로 선출됐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종정 후보로 거론되는 스님들 중 유일하게 문중 차원에서 공식적인 종정후보추대위원회가 구성됐다(11월 25일 현재). 중봉성파 대종사는 30안거를 성만한 수좌인 동시에 시조시인이자 예술가다. 선사상을 서예와 선화, 옻칠 등 예술로 승화해 대중에게 전해 왔다는 점에서 인지도가 높다.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비구계를 수계했다. 1998년 봉암사에서 수선 안거한 이래 30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종 제5·8·9대 중앙종회의원과 통도사 주지, 영축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3월 영축총림 방장으로 추대됐다.

'사과' 온 정청래 의원, 관람료 인식 왜곡 여전

11월 25일 뒤늦은 조계종 방문
공분여전…사과 진정성에 의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25일 오전, 사과를 위해 조계종을 방문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올해 10월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폄하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25일 오전, 사과를 위해 조계종을 방문했다. 하지만 추후 일정을 잡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라는 조계종 측의 요구에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사과 방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날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는 오랫동안 국민 불편사항"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한 데에 따른 편견과 문화재를 향한 왜곡된 인식을 재차 드러내 사과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들게 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조계사 일주문 앞에 도착한 정청래 의원은 "성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표현상 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계종은 문제의 발언 후 51일 만에 찾아온 정 의원에 대해 명확한 거부 입장을 보였다. 조계종 기획실장 삼혜 스님은 조계종을 대표해 "상황 상 여러 차례 방문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찾아온 것에 대해 불편하다"며 추후 정식으로 약속을 잡고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부처님께 삼배라도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일주문 앞에서 합장 반배로 인사 후 발길을 돌렸다.

이날 정청래 의원은 사과 차 방문했다고 했지만 "문화재 관람료는 오랫동안 국민 불편사항"이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정청래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정안은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을 규정한 문화재 보호법 제49조 3항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의 지역주민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등을 위해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개정안 역시 사찰이 소유재산에 따른 비용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들이 국립공원 내 부지로 사실상 강제 편입되면서 빚어진 문제이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불교계가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청래 의원의 사과는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자들의 공분을 뒤늦게 진화하기 위한 표면적인 사과라는 여론이 적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은호 기자

'탄중위' 난항 속 도움 요청한 정부

황희 장관, 11월 25일 7대 종교간담회

'2050탄소중립' 실천 운동 등
협조 요청 · 협력안 의견 교류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과 관련,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대 종교지도자들에게 캠페인 등 실천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앞서 정부 주도로 출범한 민관협력기구 탄소중립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종교위원들이 방향성과 실효성 등 문제로 전원 사퇴한 상황에서, 정부와 종교계간 협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7대 종교 지도자 초청간담회'를 열고 '2050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교계 협조를 요청했다.〈사진〉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황희 장관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가 시작된지 4주째 접어들었다. 그동안 종교계의 협조와 노력 덕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기에 재차 감사를 전한다"며 "더불어 우리가 직면한 또다른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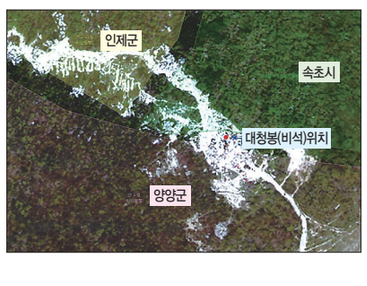
인사말 직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종교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협력에 나서면서, 그동안 각 종교가 분산적으로 진행해 온 기후위기 관련 활동들도 연대를 통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탄소중립위원회' 종교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종교계의 이번 협력이 단순한 정책홍보에 그칠 수 있다는 도우려도 나온다. 송지희 기자

소유자 배제한 지자체간 '대청봉' 논란 "유감"

조계종 재무부, 11월 24일 입장문

"신흥사 동의 없다면 불법"
논쟁 즉각중단 · 참회 촉구



속초시와 인제군, 양양군 등 3곳 지자체가 설락산 국립공원의 상징인 '대청봉'의 경계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토지소유권자인 신흥사가 배제된 논쟁은 어떤 결과든 법적하자를 가지기에 무의미하다"며 중단을 촉구했다.〈사진〉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탄하)는 11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소유 설악산 대청봉의 소유권을 둘러싼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다툼을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대청봉 소유권 논란은 해당 토지 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와 어떠한 협의나 승낙 없이 진행된 경계 정정으로 촉발됐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위법적 행위이자 타인의 재산권을 두고 제3자가 논쟁을 벌이는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논쟁"이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설악산 대청봉(표지석)의 소재지는 지금까지 '속초시 설악동 산 41'로 인정돼 왔다. 경계 정정이 필요할 경우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강원도 역시 이번 논란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신청과 승낙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3개 자치단체는 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를 배제한 채, 대청봉의 상징성을 두고 경쟁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계종은 "토지 소유자를 배제한 자치단체들만의 무의미한 논란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논란을 촉발시킨 관련 당사자들은 반드시 신흥사에 참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청봉의 상징성을 활용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경계 정정과 같은 비이성적, 비상식적 논란을 접하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청봉 소유자인 신흥사와 무관하게 논쟁중인 이번 사안은 어떠한 결론이 내려진다하더라도 그 결론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내 사찰 소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각 지자체들의 행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설악산 국립공원은 그 상징인 대청봉과 주요 경관지인 토왕성 폭포, 권금성, 흔들바위, 백담계곡 등을 포함한 1200만평 가량이 신흥사 등 사찰 소유지다. 그러나 1970년 토지 소유자인 사찰의 동의 없이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 것은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한 고충을 감내해야 했다.

조계종은 "이런 상황에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자치단체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소유권 다툼을 벌이거나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작금의 현실과 정책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사무처장에 진경 스님

원행 스님, 11월 23일 임명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신임 사무처장에 진경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진경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과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원행 스님은 11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경 스님에게 사무처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은 그동안 사무처장 직급 없이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 한일불교계 교류 등에 관한 실무역할을 보다 확대키로 하고 진경 스님을 처음으로 임명했다. 이날 임명식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이사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와 사무총장 향운 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원경 스님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2022년 예정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지난 40여년간 지속됐던 한일불교간 관계를 다시금 원만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사,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주도한다

서울마을센터 수탁기관 선정…10년만의 재구조화

신규수탁기간 2022년까지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새롭게 주도할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11월 21일부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수탁하고 마을센터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이끌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서울마을센터)' 운영주체를 (사)마을에서 조계사로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서울시와 조계사는 11월 12일 운영 위 ·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까지 1년간 조계사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마을센터 운영주체가 바뀐 것은 10년만의 일이다. 운영주체가 조계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실효성 여부 등 각종 논란이 야기됐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구조 재편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계사 즉은 1년간 서울마을센터 기능의 효율화와 사업 실효성 확대,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지난 3년간 종로구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해오면서 마을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주민과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 불교의 지향점인 만큼 협약기간동안 서울시와 신뢰를 기반으로 충실히 광역 마을공동체 사업을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